

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與 악재 정면 돌파

‘尹-명태군 녹취록’ 공개 후 지지율 최저…탄핵 움직임에 위기감 고조 국힘 최고위…김 여사 활동 중단 등 용산 인적 개편·국정 쇄신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권의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목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국민 사과 등 구체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초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관련 3대 조치(대의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진윤(윤석열)계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대통령실도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 31일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군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고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됐다.

한 대표가 이날 쇄신 범위를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낸 것은 더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만 여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쇄신 조치의 ‘데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1월 하순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보다 더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친한(한동훈)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를 놓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옹호한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알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뿐 아니라 당 원로들과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쇄신 요구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메시지 발표에 앞서 당 중진 등과 소통을 거쳤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도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조인철·전진숙·조계원 ‘이재명 특보단’에

민주당 대표 특보단 1차 28명 공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에 대해 임명됐다.

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표 특보단의 1차 구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특보는 총 28명이다.

이 가운데 조인철(광주 서구갑), 전진숙(광주 북

구을), 조계원(여수을) 의원 등 3명의 광주·전남지역 의원이 포함됐다.

정무당장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경제당장에는 유동수 국회의원 임명됐다.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에 전용기, 정무특보에 안태준, 전략특보에 김현정, 기획특보에 정을호 국회의원, 경제특보단에는 민생경제특보에 홍기원, 기획재정특

보에 조인철, 과학기술특보에 황정아, 국토교통특보에 손명수, 서민경제특보에 박홍배, 소상공인특보에 오세희 국회의원이 각 임명됐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은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맡았다. 특보단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고 정책·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힘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민주, 전공의 단체 불참에 참여 불확실…국힘 “불참시 여·의·정만 출범”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의대 증원을 논의하고 의료 차질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우선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출발을 미루기는 어렵다”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

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인류적인 범죄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안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정부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를 예측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제사회, 우방국 간의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본전에 의도치 않게 끌려들어 가는 상황 역시 예방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대 새병원 예타 통과를”

국힘 광주시당, 중앙당 찾아 요청

김정현(사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4일 정진 전남대병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 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지역 필수 의료와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 예타 통과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조1438억원, 1070병상 규모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김상훈 의장은 “새 병원 건립 등 광주의 현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마을기업 지원·성장기반 조성’ 법안 대표발의

신정훈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4일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며 고용 1만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읍·면·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 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